

“발포 명령자 밝혀내야 처벌도 용서도 가능”

③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

30년 전 발발한 5·18민중항쟁은 세계사에서도 가장 빛나는 민주투쟁으로 꼽힌다.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 스스로 독재 권력에 정면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5·18은 그 어떤 민주화운동과도 차별화된다. 항쟁 발발 20여년 만에 학살 책임자에 대해 법적 단죄를 했고, 항쟁의 성격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는 등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은 아직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노태우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 처벌을 했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최초 발포 명령자 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또 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이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5·18을 ‘폭도에 의한 난동’, ‘간첩에 의한 폭동’과 같이 표현하는 등 ‘정치적 망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80년 수 천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5·18의 학살 책임자 단죄는 17년간에 걸친 국민적 투쟁 끝에 이뤄졌다.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1997년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17년형이 선고됐다.

두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까지는 공소시효인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5·18 이후에도 이들 가해의 당사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광주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검찰은 국민의 절박한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5·18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의 찔을 수 없는 ‘생체기’를 남겼다.

더구나 ‘천신만고’ 끝에 전·노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점도 영원한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항쟁이 발발한 지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초 발포 명령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5·18 단체들은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야만 학살 책임자에 대한 단죄는 물론, 당시 군인들에 의한 암매장 등 역사속에 묻힌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18에 대한 명예회복 역시 미흡한 부분이



5·18 30주년 로고

노월을 넘어 광극을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1989년 12월 국회 5공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증언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요식적 단죄 그쳐...총체적 규명작업 필요 전국적 차원 5·18 인식 제고 교육도 절실

5·18은 오랜 동안 ‘광주사태’로 표현됐다. 문민정부 시절에야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격상됐다.

이 같은 긍정적 발전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지만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들은 5·18을 ‘북한에 의한 난동’으로, 항쟁 참가자들을 ‘폭도’로 왜곡하는 등 사회적 갈등마저 일으키고 있다.

5·18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명확한 진실규명 미흡과 정부차원에서의 교육 의지 부족, 뿌리깊은 지역 감정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5·18 교과서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5·18을 주제로 한 영화나 연극,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활성화 노력

이 병행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진 교수는 “현재까지 5·18 책임자 처벌은 학살의 총체적인 규명작업이 아닌, 두 핵심 책임자에 대한 요식적인 처벌에 그쳤다”며 “학살의 주범이나 군부 등의 증언을 통한 최초 발포자 등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책임자 처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5·18은 당시 신군부에 맞선 절대공동체의 저항의 산물인데도 여전히 광주·전남의 ‘소외된 저항’으로 보는 시각이 높다”며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선 전국적인 차원에서 5·18에 대한 역사인식 제고와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형성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항쟁의 주역

박석무

“시민·5월 단체·사회 각계 힘모아 명예회복 등 ‘미완의 과제’ 풀어야”

“5·18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명예회복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은 물론, 시민과 5월 단체, 사회 각계가 30주년을 계기로 뜻을 모아 힘모아야 합니다.”

10일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5·18의 향후 과제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통한 진정한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 등을 꼽았다.

박 전 이사장은 “5·18은 시민들이 총칼을 들고 30년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숭고한 희생의 결정체”라며 “특히 5·18은 6·10항쟁과 6.29선언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모태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18 직후엔 5월 항쟁의 주역들이 소위 ‘내란죄’ 피고인이었지만 결국엔 전두환, 노태우 등 책임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며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처벌이 완성되기 위해선 최초 발포자 규명 등 정확한 진실 규명작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회복 문제가 5월 당시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외하곤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며 “5월 항쟁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가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3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상당수 국민들이 5·18을 단순한 ‘폭동’이나 시민들의 법질서 위반 사건 등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시민 모두의 명예를 선양시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해선 5·18 관련 교과서나 영화, 뮤지컬, 정부 차원의 교육 등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18이 30주년을 접어든 만큼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념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며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5월 항쟁의 현재화와 미래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교과서나 영화, 뮤지컬, 정부 차원의 교육 등 다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5·18이 30주년을 접어든 만큼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념사업 추진이 절실하다”며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전남대 5·18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5월 항쟁의 현재화와 미래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회복 문제가 5월 당시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제외하곤 여전히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다”며 “5월 항쟁으로 인해 직장에서 쫓겨나가거나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본 시민 모두에 대한 명예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3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상당수 국민들이 5·18을 단순한 ‘폭동’이나 시민들의 법질서 위반 사건 등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시민 모두의 명예를 선양시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Eye Elisia) eye clinic,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ne number 052-671-1199.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by '大山프리모님네가발', offering a 50% discount on wigs.